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에서 사드(THAAD) 논란이 갖는 의미: 자율성-안보 교환 모델의 적용

박휘락*

- I. 서론
- II. 자율성-안보 교환 모델에 관한 이론과 적용
- III.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논란
- IV. 사드 배치 관련 논란의 분석
- V. 결론: 한국 안보에 관한 함의

주제어: 사드(THAAD), 한미동맹, 한중관계, 북한 핵위협,
자율성-안보 교환, 동반자관계

| 국문초록 |

본 논문은 수년 동안 계속되어온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에 관한 논란이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에서 갖는 의미를 국제정치 이론에 의하여 분석해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동맹이론 중 하나인 '자율성-안보 교환 모델'을 적용하여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분석하고, 한국이 처한 상황을 판단한 후, 필요한 함의를 도출하였다.

사드는 원래 하나의 무기체계일 뿐이지만 이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논란은 한미동맹과 한중관계를 좌우하는 국제정치적 사안으로 격상된 상태이다. 이것은 강화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 전략적 경쟁에 영향을 받기도 하였지만,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한미동맹과 유사한 유용성으로 인식하여 결정을 미뤘은 한국의 탓도 없지 않다.

무엇보다 한국은 한미동맹과 동반자관계인 한중관계가 대등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려면 기본적으로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중요시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자율성-안보 교환 모델'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한미동맹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바를 더욱 적극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드 배치를 둘러싼 지금까지의 논란이 일부 인사들의 과장된 의혹 제기에서 비롯된 점도 적지않다는 점에서 정부는 사드를 비롯한 제반 군사적 사안을 적시적이며서 친절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국민들도 사안을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선동에 휘말리지 않아야 할 것이다.

✦ 『국제관계연구』 제21권 제1호 (2016년 여름호).

<http://dx.doi.org/10.18031/jip.2016.06.21.1.33>

*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I. 서론

공격해오는 적의 탄도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邀擊)하는 무기 중의 하나인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논란이 2년 이상 진행되고 있다. 2016년 2월 7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하자 한국의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기로 발표하고, 실무 협의기구까지 구성하여 협의하고 있으나, 아직도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중국이 유사시에 미국으로 발사하는 대륙간탄도탄(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을 사드가 요격할 수 있고, 사드의 레이더가 중국의 다양한 군사 활동을 탐지함으로써 중국을 위협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미국과 중국 간에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한국은 그 사이에서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오랜 토론을 통하여 국내에서는 사드가 중국의 ICBM을 타격하지 못하고, 레이더도 종말모드(Terminal Mode)로 운영되어 중국의 군사 활동을 탐지할 수 없다는 점이 밝혀지고 있고 있으며,¹⁾ 따라서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여론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초에도 중국의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사드는 중국을 겨누는 미국의 칼춤”이라면서 사드 배치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²⁾ 2016년 4월에 워싱턴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 직전에 가진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주석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으며,³⁾ 2016년 6월 5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5차 아시아 안보회의(상그릴라 대화)에서 중국의 쑨젠궈(孫建國) 중국 연합참모부 부참모장 역시 기조연설을 통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⁴⁾ 즉 한국 내에서 시작된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은 중국에 의하여 중요한 국제정치적 쟁점이 되었고,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에 관

1) 홍규덕, “사드(THAAD) 배치에 관한 주요 쟁점과 미사일방어(MD) 전략,” 『신아세아』 제22권 4호 (신아시아연구소, 2015); 박근재, “사드(THAAD)의 한국 배치를 둘러싼 논란과 정책적 함의,” 『전략연구』 통권 제68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6); 박휘락, “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싼 논란에서의 루머와 확증편향,” 『전략연구』 제68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6).

2) 『조선일보』, 2016년 2월 15일, p. A3.

3) 『조선일보』, 2016년 4월 2일, p. A1.

4) 『동아일보』, 2016년 6월 6일, p. A5.

한 중요한 의제 중의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사드는 이제 군사기술 차원이 아닌 국제정치 이론에 의하여 분석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입장에서 사드가 지니는 국제정치적 의미를 분석하고자 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국제정치이론 중의 하나는 ‘자율성-안보 교환모델(autonomy-security trade-off model)’이다. 이것은 알트펠드(Michael F. Altfeld)와 모로우(James D. Morrow)가 발전시킨 이론으로서,⁵⁾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비대칭 동맹(asymmetric alliance)에서는 약소국이 자율성을 양보해야 강대국이 안보를 제공한다는 주장인데, 이에 의하면 북한 핵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가 절실한 한국으로서는 미국이 요구하는 사드 배치를 허용해야만 한다. 그런데 한국은 중국과 2008년부터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체결한 상태이고,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비핵화를 지원해주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의 입장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한국은 사드 배치가 한미동맹이나 한중관계에서 어떤 의미를 차지하는지를 분석해보고, 그에 따라 최선의 정책방향이 무엇인지를 판단해보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하여 본 논문은 ‘자율성-안보 교환모델’을 분석의 틀로 삼아 제2절에서 그 내용을 소개하고, 제3절에서는 사드에 관한 논란의 배경과 경과를 기술함으로써 사안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시킬 것이다. 그리고 제4절에서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이 한미관계와 한중관계에서 어떤 국제정치적 의미를 갖는지를 분석하고, 결론에서 한국이 참고해야 할 몇 가지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5) Michael F. Altfeld, "The Decision to Ally: A Theory and Test," *The Western Political Quarterly*, Vol. 37, No. 4 (Dec. 1984); James D. Morrow, "An Alternative to the Capabilities Aggregation Model of Allianc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5, No. 4 (Nov. 1991).

II. 자율성-안보 교환 모델에 관한 이론과 적용

1. 자율성-안보 교환 모델

동맹(alliance)은 특정 국가가 다른 국가의 힘을 빌려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고전적 방법으로, 냉전시대의 유산으로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비대칭이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비대칭 동맹에 관하여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알트펠드는 ‘자율성-안보 교환모델’을 제시하였는데, 그는 1984년 발표한 논문을 통하여 ‘국가안보’, ‘국민경제’, ‘자율성’이라는 세 가지가 교환적 관계라는 가설을 설정한 후 이것을 1824~1900년 동안 형성된 유럽의 동맹사례에 적용하여 검증하였다. 그가 내린 결론은 “비대칭 동맹에서 약소국들은 동맹의 추가지원을 구매하는 대신에 일정한 자율성을 포기하며, 이로써 군비투자를 자제하여 결과적으로 경제력을 증대시킨다”는 내용이었고,⁶⁾ “이러한 교환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동맹은 형성되지 않거나 폐기된다”는 주장이었다.⁷⁾

모로우는 1991년 발표한 논문에서 “동맹은 안보와 자율성이라는 상충되는 목표 간의 선택을 요구하는데, 하나를 추구하고자 하면 다른 하나에서는 희생이 따라야 한다”⁸⁾면서 알트펠드의 교환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즉, 비대칭 동맹에서 약소국들은 안보를 지원받는 대신에 강대국이 요구하는 정책을 수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약소국들은 “군사기지, 외교정책이나 국내정책의 조정과 같은 사항을 양보함으로써 강대국인 동맹국의 행동의 자유를 증대시키는 대신에 외부위협에 대한 보호력을 강화한다.”⁹⁾ 그리고 강대국들은 세계 전략적 차원에서 대규모 군사력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특정 국가와 동맹관계를 맺고 지원해준다고 해서 추가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약소국의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침으로써 자국의 이익을 강화할 수 있으며, 군사기지 사용이나 방위비 분담면에서 약소국으로부터 양보 받은 자율성 자체가 매우 요긴할 수 있다. 이

6) Altfeld (1984), p. 528.

7) Altfeld (1984), p. 528.

8) Morrow (1991), p. 930.

9) Morrow (1991), p. 905.

와 같이 자율성-안보 교환으로 강대국과 약소국 모두의 이익이 충족되기 때문에 비대칭 동맹은 대칭동맹에 비해 더욱 매력적일 뿐만 아니라 오래 지속될 수 있다. 특히 두 동맹국 간의 능력 격차가 클수록 동맹의 지속성은 더욱 커진다.¹⁰⁾

안보-자율성의 교환은 동맹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교환이 의무화된 것이 동맹이지만,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관계에서는 언제나 어느 정도의 교환관계가 작용한다. 동맹에 가까운 관계일수록 교환성이 강하고, 동맹에 먼 관계일수록 교환성이 약할 뿐이다. 최근 통상적인 국제관계와 동맹의 중간 상태에서 ‘동반자(partnership)’라는 용어가 사용되는데, 이것은 동맹과 달리 적이나 공통의 위협을 상정하지 않는 관계로서,¹¹⁾ 기본적으로 상대국에 대한 법적인 의무나 책임에 대한 규정이 없지만,¹²⁾ 동반자관계조차 아닌 관계에 비해서는 ‘안보-자율성의 교환’이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 모로우는 안보와 자율성이라는 두 개의 축을 사용하여 이들의 교환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통관계와 동반자관계까지 확대하면 <그림 1>과 같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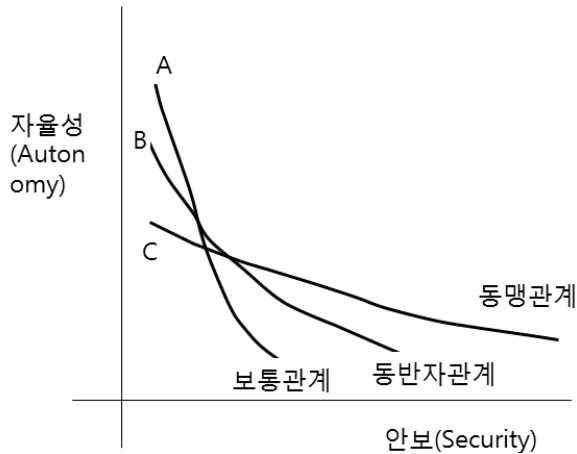
<그림 1>을 보면, 곡선A는 보통의 국제관계이고, 곡선C는 동맹관계이며, 그 사이의 곡선B는 동반자관계인데, 이들 모두 어느 정도의 자율성과 안보를 교환하게 된다. 다만, 곡선A에서 보듯이 보통의 국제관계에서는 약소국의 자율성이 기본적으로 높은 상태로서, 이를 양보하더라도 강대국의 안보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도는 크지 않다. 반면에 곡선C는 동맹관계인데, 기본적으로 자율성이 다소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자율성을 양보함에 따라 안보가 늘어나는 정도가 크다. 당연히 동반자관계는 동맹과 보통관계의 중간으로서 자율성의 침해 정도도 적지만, 자율성 양보를 통한 안보의 증대 정도도 작다. 결국, 이 중에서 어떤 방식을 선택할 것이냐는 것은 해당 국가의 선택일 것인데, 자율성도 보장하면서 안보지원도 증대시킬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10) Morrow (1991), pp. 905-906.

11) 유동원, “중리 전략동반자관계와 경제협력,” 『국제정치연구』 제9집 2호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06), p. 254.

12) 나토(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북대서양조약기구)가 사용하는 ‘평화를 위한 동반자관계(PfP: Partnership for Peace)’는 동맹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인 나토헌장 제5조, 즉 회원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있을 경우 이를 지원한다는 조항은 적용하지 않는 관계이다. 이수형,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지구적 동반자관계: 유럽 역내의 관련 국가들의 입장과 한미동맹에 대한 함의,” 『국방연구』 제53권 1호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0), p. 5.

〈그림 1〉 약소국 국제관계에서의 자율성과 안보관계



출처: Morrow (1991), p. 917의 도표에 A와 B 곡선을 추가

2. 한미동맹의 경우

한국은 1953년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동맹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그 당시 한국은 위낙 저발전 상태여서 비대칭 동맹의 약소국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동안 한국의 경제성장으로 국력이 크게 신장되었지만, 인구나 국토 등 고정적 요소의 차이가 워낙 커서 동맹의 비대칭성은 여전하고, 군사력과 외교적 영향력 등 연성요소(smart power)까지 고려한다면 한미 양국의 국력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다. 한미 양국의 주요 국력요소를 비교해보면 <표 1>과 같은데 경제력의 차이도 아직은 1:10으로 차이가 크다.

비대칭 동맹에서 미국의 안보지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은 자국의 군대를 유엔군사령부의 작전통제하에 두는 것에 동의하였고, 평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한 이후에도 전시 즉 방어준비태세(DEFCON)-3(5단계가 평시이고, 1단계가 전쟁임박인데, 현재 한국은 4단계로 유지하고 있다)이 되면 미군 대장이 한미연합사령관으로서 한국군을 작전 통제하도록 자율성을 양보하고 있다.¹³⁾ 한국은

1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미동맹 60년사』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3), p. 79.

〈표 1〉 한국과 미국의 주요 국력요소 비교

항목	미국	한국	비율
인구	3억 2,137만 명	4,912만 명	6.5 : 1
면적	983만km ²	10만km ²	98 : 1
경제력	17.4조 달러(PPP)	1.8조 달러(PPP)	10 : 1

출처: Central Intelligence Agency, “The World Fact Book,”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 (검색일: 2016년 4월 1일)

1991년 3억 달러에서 시작하여 2014년에는 그 규모가 9,200억 원(약 9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주한미군의 주둔경비를 지원하고 있다.¹⁴⁾ 또한 대부분의 외교적 사안에서 한국은 미국의 입장을 전폭적으로 수용 및 지지하고 있다.

한국의 자율성 양보에 대한 교환으로 미국은 주한미군(USFK: United States Forces Korea)을 주둔시켜 안보를 제공하고 있는 바, 6.25 전쟁 종료 시인 1953년에는 325,000명까지 주둔하다가 60년대까지 60,000명,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는 40,000명, 2000년대에는 30,000명 수준으로 감소되어¹⁵⁾ 현재는 28,500명에 불과하지만, 미국 안보공약 이행을 보장하는 상징적 역할은 변하지 않고 있다. 주한미군을 중심으로 한미 양국군은 한미연합사령부(CFC: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를 구성하고 있고, 연합으로 작전계획을 발전 및 연습함으로써 한반도의 전쟁억제와 유사시 승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유사시에는 대규모 증원군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14) 박휘락, “방위비분담 현황과 과제 분석: 이론과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국방정책연구』 제30권 제1호 (한국국방연구원, 2014), p. 154.

1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미군사관계사 1871-2002』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3), p. 677.

3. 한중관계의 경우

한국과 중국은 2008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체결하였다. 동반자관계의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해둔 것은 아니지만, 보통의 관계보다 긴밀한 것은 분명하다. <표 2>에서 보듯이 중국과 한국은 미국과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비대칭성이 적지 않고, 따라서 다소 간의 ‘자율성-안보 교환관계’가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

한중관계의 경우 1992년 수교 이래 급속하게 관계가 발전되었고, 참여정부에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추진할 정도로 중국에 대한 기대가 컸다. 2008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체결한 이후 그 관계는 더욱 긴밀해져서 중국은 한국의 제1교역 상대국이 되었다. 한국의 대중 수출규모는 1992년 약 26.5억 달러에서 2014년 약 1,453.3억 달러로 약 54.8배, 수입은 동기간 약 37.2억 달러에서 900.7억 달러로 약 24.2배 증가하였다.¹⁶⁾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중요한 기구인 6자회담의 주도국일 뿐만 아니라 북한에게 가장 영향력이 높은 국가이다. 그래서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에 가입하지 않으면서도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에는 가담하였고,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9월 3일 미국의 동맹국 지

〈표 2〉 한국과 미국의 주요 국력요소 비교

항목	중국	한국	비율
인구	13억 6,748만 명	4,912만 명	28 : 1
면적	933만km ²	10만km ²	93 : 1
경제력	19.5조 달러(PPP)	1.8조 달러(PPP)	11 : 1

출처: Central Intelligence Agency, “The World Fact Book,”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 (검색일: 2016년 4월 1일)

16) 현대경제연구원, “한중 경제 관계의 중요성과 나아가야 할 방향,” 『현안과 과제』 16-8호 (현대경제연구원, 2016.03.09), p. 2.

도자로서는 유일하게 중국의 전승(항일전쟁 및 세계 반(反)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증진하고자 노력하였다.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의 유용성은 낮지 않다. 한국은 중국의 4번째 수출 및 교역 상대국이고,¹⁷⁾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이나 일본과의 세력 각축이 강화됨에 따라 그 전략적 가치는 더욱 커지고 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은 취임 후 첫 방문국가로 한국을 선정하여 2014년 7월 한중 정상회담을 갖기도 하였다.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반대해왔고, 북한의 핵개발로 인하여 결정된 유엔의 경제제재안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입장이다. 비록 동맹관계는 아니지만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보통의 관계보다 긴밀해진 상태이고, 이것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자율성-안보 교환’이 다소간 기능해야 할 것이다.

III.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논란

1. 배경

사드의 배치를 둘러싼 논란은 해외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인 ‘TMD(전구 미사일 방어: Theater Missile Defense,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체계는 당시 NMD—National Missile Defense—라고 불렀다)’에 ‘참여’¹⁸⁾하지 않는 것으로 정책을 변경한 김대중 정부 시절의 결정에 뿌리를 두고 있다. 1991년 미군 막사에 대한 이라크의 미사일 공격사례를 본 후 한국에서는 미국 TMD의 개념을 참고하여(미국과 협력하여) 필요한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었으나, 북한과의 화해협력정책이 전개되면서 이 정책은 변경되었고,¹⁹⁾ 지속적으로 적용되어 왔다. 그래서 2001년 취임한 미국의 부시 대통령

17) 현대경제연구원 (2016), pp. 2-3.

18) ‘참여’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부터 잘못된 점이 있다. 북한의 미사일이 있는 한 한국의 자체적인 방어망 구축은 필요하고, 그렇다면 미국 TMD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의 ‘협력’으로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해나가는 사업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George W. Bush, 아들)이 NMD와 TMD를 ‘MD(Missile Defense)’로 통합하면서 이에 대한 한국의 협력을 요청하자, 한국은 이에 부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 인사들은 ‘한국의 탄도미사일 방어=미 MD 참여’라면서 반대하기 시작하였다.²⁰⁾

2002년 6월 발생한 효순이·미선이 사건으로 반미감정이 고조된 상황에서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는 위와 같은 인식을 공유하였고, 따라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 Korea Air & Missile Defense)’라는 용어를 통하여 미국과의 협력 없이 종말단계(終末段階, terminal phase) 하층방어(lower-tier defense)를 중심으로 탄도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하기로 결정하였다.²¹⁾ 그나마도 공격해 오는 미사일에 대한 직격파괴(直撃破壊, hit-to-kill: 미사일의 몸통을 직접 타격하여 파괴하는 것) 능력을 갖춘 PAC-3 요격미사일 대신에 항공기 방어용으로 제한된 미사일 요격능력만 갖는 PAC-2 미사일 2개 대대를 구매함으로써 하층방어의 요격능력도 미흡한 상태가 되었다.²²⁾ 그리고 이때부터 한국의 탄도미사일 방어에 관한 논의는 최선의 추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의 협력 여부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2006년 북한의 제1차 핵실험 이후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핵무기를 탑재한 북한의 미사일, 즉 ‘핵미사일’ 공격을 우려하여 더욱 포괄적인 탄도미사일 방어 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나 야당과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의 반대 주장이 워낙 강하여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였다. 미국에서는 부시 행정부의 럼스펠드(Donald H. Rumsfeld) 장관 퇴임과 더불어 ‘MD’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BMD(Ballistic Missile Defense)’라는 보편적 용어가 다시 사용되었지만, 이들은 계속 MD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한국이 탄도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동북아시아의 군비경쟁을 촉발하거나 남북관계를 중단시킬 수 있고, 대규모 예산만 소요하게 되면서 성과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²³⁾

이러한 상황은 박근혜 정부까지도 계속되어 2013년 10월 개최된 첫 번째

19) 『동아일보』, 1999년 8월 15일, p. A8.

20) 정옥식, 『미사일 방어체제(MD)』(서울: 살림, 2003).

21) 『조선일보』, 2013년 6월 11일, p. A1.

22) 『조선일보』, 2005년 5월 16일, p. A2.

23)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미국 MD에 참여 규탄 기자회견문』(2008.03.20).

한미 양국 국방장관 간 회담인 ‘연례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를 전후하여 미국이 한국에게 ‘MD 참여’를 종용한다는 추측성 보도가 봇물을 이뤘고,²⁴⁾ 이러한 반대로 인하여 북한의 핵위협이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BMD 추진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미측 인사가 한국도 BMD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하거나 한국군 내부에서 하층방어의 수준을 넘는 어떤 대책을 논의하게 되면 야당과 진보적 시민단체들은 ‘미 MD 참여’라면서 반대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2. 경과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PAC-3 2개 대대로는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그들의 생존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데서 비롯되었다. 2014년 5월 28일(미 현지 시각) 제임스 윈펠드(James A. Winnefeld) 미 합참차장의 “사드의 한국 배치 검토 중”이라는 언급이나,²⁵⁾ 2014년 6월 3일 스캐퍼로티(Curtis Scaparrotti) 한미연합사령관이 “본국에 사드 전개(배치)를 요청하였다”라고 언급한 것이²⁶⁾ 이러한 맥락이었다.

미군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서 한국의 반대를 예상하지 못하였겠지만, 스캐퍼로티 사령관의 언급이 언론에 보도되자 진보성향의 인사들을 중심으로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빌미로 적극적인 반대 주장이 제기되었다. “미국이 한국 내 배치를 검토 중인 사드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인접국까지 커버’할 수 있다 ... 중국은 미국의 한국 내 MD 배치를 동북아의 화약고인 한반도에 미국이 위험한 인화물질을 갖다놓는 것으로 여긴다 ... 미국 주도의 MD가 중국 자신을 겨냥하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²⁷⁾라는 주장이었

24) 조선일보의 경우 2013년 10월에 MD를 주제로 쓴 기사는 10월 1일 A3면, 10월 2일 A1과 A35면, 10월 3일 A6면, 10월 5일 A3면, 10월 7일 A4면, 10월 16일 A3면, 10월 17일 A4면, 10월 22일 A4면, 10월 25일 A6면, 10월 26일 A6면이다. 그리고 “戰作權과 미사일 방어(MD) 참여 한 묶음으로 묶어진 안 패”(10월 2일)와 “미사일 방어(MD) 논란, 무엇이 진실인가”(10월 16일)라는 제목의 사설도 2회 게재되었다.

25) 『조선일보』, 2014년 5월 30일, p. A1.

26) 『조선일보』, 2014년 6월 4일, p. A1.

다.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싸드(THAAD)』라는 소설이 발간되었고 다수의 국민들이 이를 읽음으로써 사드 배치 반대 주장은 삼시간에 확산되었다. 이 책에서는 픽션과 논픽션을 혼합하여 “한국이 싸드를 받는다면 미국 편에 서서 중국과 전쟁을 하지는 뜻에 다름 아닙니다 ... 중국은 반드시 복수를 합니다”라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²⁸⁾

사드를 둘러싼 한국에서의 논란은 중국에까지 전달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중 양국 지식인들과 언론이 서로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 및 공유하였고, 한국에서 부각된 반미성향의 주장은 중국에게는 유리한 요소였기 때문이다. 급기야 2014년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국이 주권 국가임을 언급하면서 미국의 사드 배치를 허용하지 않도록 요청하였다.²⁹⁾ 시진핑 주석의 요구가 공식화된 것은 아니지만, 이후에 한국을 방문한 중국의 관리들은 한반도의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대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 2014년 11월 26일 한국 국회에서의 추귀홍(邱國洪) 주한 중국대사,³⁰⁾ 2015년 2월 4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 국방장관 회담에서의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장관),³¹⁾ 3월 중순 방한한 류진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³²⁾ 등이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였다.

사드 배치에 대한 국내여론과 중국의 반대 의견으로 인하여 한국 정부는 한미 동맹에 의해서만 사드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고, 따라서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게 되었다. 중국 국방부장의 방문 후 한민구 국방장관은 “사드 배치를 결정하거나 협의한 바가 없으며”라고 설명하였고,³³⁾ 중국 외교부장 조리의 방문 이후 청와대는 “사드 배치에 관한 (미국의) 요청, 협의, 결정이 없었다”며 소위 ‘3 No’라는 입장을 발표하였다.³⁴⁾ 사드의 배치 문제는 한미동맹 및 한중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 되었고, 한국 정부의 숙고는 불가피하

27) 『프레스리안』, 2014년 6월 2일.

28) 김진명, 『싸드(THAAD)』 (서울: 새움, 2014), p. 289.

29) 『조선일보』, 2015년 3월 17일, p. A1.

30) 『뉴시스』, 2014년 11월 26일.

31) 『조선일보』, 2015년 2월 5일, p. A6.

32) 『조선일보』, 2015년 3월 17일, p. A1.

33) 『조선일보』, 2015년 2월 5일, p. A6.

34) 『연합뉴스』, 2014년 3월 11일.

였다.

2016년 1월 6일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실시하여 수소폭탄을 개발하였다고 발표하자 한국에서는 사드의 배치 필요성이 부상하였다. 2016년 1월 13일의 연두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이런 것을 감안해가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고,³⁵⁾ 야당에서조차 “북한 핵무장에 가장 좋은 대비책은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라면서 “그동안 (사드 배치를) 주저한 것은 중국의 강력한 반대 때문인데, 중국도 지금 상황에서 자위권 차원의 사드 배치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사드 배치를 요구하게 되었다.³⁶⁾ 언론도 사드가 중국의 군사 활동을 탐지한다든가, 사드가 배치되면 한국이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의 전진기지가 될 것이라는 등의 주장은 오해라는 사실을 발표하기도 하였다.³⁷⁾ 그러다가 2016년 2월 7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까지 실시하자 한미 양국군이 실무단을 구성하여 사드 배치에 관한 실무협의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3. 평가

군사 이론적으로 볼 때 사드와 같은 방어 무기체계의 배치가 논란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한국과 주한 미군이 BMD를 강화하는 것이나 동맹관계하에서 BMD 구축에 서로 협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실제의 능력에 있어서 사드는 중국의 대륙간탄도탄(ICBM)을 요격할 수도 없고, 사드의 레이더가 중국의 군사 활동을 탐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한국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³⁸⁾ 즉 사드는 요격고도가 150km로서 1,000km 이상의 고도로 비행하는 중국의 ICBM을 요격할 수 없고, 더구나 중국의 ICBM은 한반도 상공을 경유하지 않는

35) 『조선일보』, 2016년 1월 14일, p. A3.

36) 『연합뉴스』, 2016년 1월 14일.

37) 『동아일보』, 2016년 1월 20일, p. A3.

38) 박근혜 (2016), pp. 48-50.

다.³⁹⁾ 사드가 사용하고 있는 AN/TPY-2 X-Band 레이더도 요격미사일의 눈 역할을 하는 종말단계용(terminal mode)으로서 인공위성 등으로부터 발사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은 후 600~1,000km 범위에서 ‘추적’하여 요격미사일을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고, 중국의 군사 활동을 탐지하는 것이 아니다.⁴⁰⁾ 최근에는 이 레이더를 배치하면 대규모 전자파가 방출된다는 루머도 제기되었지만, 사드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괌(Guam)에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서는 100m의 안전거리 이외에는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⁴¹⁾ 이외에 사드의 배치비용을 한국이 부담한다든가 사드의 성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모두 사실이 아니다.⁴²⁾ 그래서 한국 내에서 제기된 사드에 관한 논란은 루머(rumor)와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에 의한 산물이라는 평가가 존재하는 것이다.⁴³⁾

사드에 관한 논란이 한국 내에만 국한되었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사실이 규명되고, 논란도 잠잠해졌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반대하면서부터 한국 내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듯이 사드는 중국과 미국 간의 전략적 경쟁에 영향을 주는 이슈가 되었고, 한국은 그 사이에서 명확한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특히 중국이 사드의 배치를 반대하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반대주장만 반복함으로써 더욱 국제정치적 이슈로 변모하고 있다. 논리와 상관없이 중국은 한국에게 미국과 중국 중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2016년 2월 7일 한미 양국군이 사드 배치를 협의하겠다고 발표하자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은 이에 “결연히 반대”한다면서 계획의 포기를 요구하였고, 『환구시보(環球時報)』 등의 중국 언론들은 “전쟁에 대비하거나 강대한 군사적 배치로 대응해야 한다”는 기사도 게재하였다.⁴⁴⁾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2016년 3월 11일 러시아의 외무장관과 함께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

39) 신영순, “THAAD 논쟁에 얽힌 허와 실,” 『국가안보전략』 통권 30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4. 12), p. 27.

40) 『조선일보』, 2015년 2월 24일, p. A1.

41) 국방부, “THAAD 관련 참고자료,” 비공개자료 (국방부, 2016.02).

42) 이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위해서는 박휘락, “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싼 논란에서의 루머와 확증편향,” 『전략연구』 제23집 1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6), pp. 5-36 참조.

43) 박휘락 (2016), pp. 26-29.

44) 『연합뉴스』, 2016년 2월 17일.

하기도 하였다. 중국의 어느 관리는 이스라엘이나 유럽에서 만든 사드라면 문제가 없다고 말하였고,⁴⁵⁾ 중국 정부는 사드 성능에 대한 미국의 설명 제안을 거절하였다.⁴⁶⁾

군사 이론적으로 중국이 사드 배치를 우려할 이유가 없는데 중국이 나름대로의 이유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으면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이유는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불리해지지 않기 위한 노력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세력전이이론(power transition theory)에서 보듯이 중국의 부상을 기존 패권국인 미국이 견제하려는 조치가 사드의 배치라고 중국은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방어수단 중 하나인 사드의 배치를 둘러싼 논란이 “아태 지역의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힘겨루기”로 격상된 셈이다.⁴⁷⁾ 그래서 국내에서도 중국의 사드 배치를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기 위한 시도로 인식하는 것이다.⁴⁸⁾ 이러한 경우 미국도 양보할 수 없다고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사드 배치 문제는 한국에게 ‘자율성-안보 교환’의 적용을 요구할 것이고, 결국 한국은 미국의 안보지원이나 아니면 우호적인 한중관계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국의 여론은 극단적으로 분열되어 있다. 주로 정부와 보수층은 찬성하고, 야당과 진보층은 반대하는 형국이다. 2015년 3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를 보면 찬성 42.1%, 반대 27.2%인데, 보수층의 62.9%가 찬성(반대는 12.3%)하고 진보층의 51.6%가 반대(찬성은 24.2%)하는 것으로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⁴⁹⁾ 논문이 아닌 칼럼 형식으로 표명된 의견이 대부분이지만, 학계에서도 한중관계를 위하여 배치하지 않아야

45) 『조선일보』, 2016년 3월 4일, p. A3.

46) 『연합뉴스』, 2016년 3월 30일.

47) 구본학, “한미동맹과 한중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조화,” 『신아세아』 제22권 4호 (신아시아연구소, 2015), p. 152.

48) 우정엽, “사드(THAAD)가 중국에게 위협이 되는가?” *JPI PeaceNet*, No. 2015-05 (제주평화연구원, 2015), http://jpi.or.kr/kor/regular/policy_view.sky?id=5377&code=papermorgue&code=&ref=5377 (검색일: 2016년 1월 20일).

49) 리얼미터, “美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찬성 42.1% vs 반대 27.2%,” <http://www.realmeter.net/2015/03/%eb%af%b8%ea%b5%ad-%eb%af%b8%ec%82%ac%ec%9d%bc-%eb%b0%a9%ec%96%b4%ec%b2%b4%ea%b3%84-%ec%82%ac%eb%93%9c-%eb%b0%b0%ec%b9%98-%ec%b0%ac%ec%84%b1-42-1-vs-%eb%b0%98%eb%8c%80-27-2/> (검색일: 2016년 6월 9일).

한다는 입장과⁵⁰⁾ 국가안보를 위하여 배치해야 한다는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⁵¹⁾ 다만, 2016년 2월 14일 중앙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사드 배치에 대한 찬성이 67.7%이듯이⁵²⁾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가중되면서 찬성의 의견이 증대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IV. 사드 배치 관련 논란의 분석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이 국제정치적 사안으로 격상된 만큼 이제는 논란의 진위보다는 국제정치이론에 의한 분석이 더욱 필요해졌다. 이러한 점에서 제2절에서 소개한 ‘자율성-안보 교환 모델’에 근거하여 미국과 중국, 그리고 한국의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미국의 입장

한국과 미국은 1953년 동맹조약을 체결함으로써 한반도의 유사시에 미국이 적극적인 안보지원을 제공하도록 제도화되었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체제를 구축해왔다.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라는 명칭으로 양국 국방장관이 매년 1회 교대로 만나서 안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토의해 왔고,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Military Committee Meet-

50) 이지용, “사드(THAAD) 배치 논쟁과 한·중 관계,” IFANS FOCUS, 2016-03K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6.02.29); 홍순도, “사드 배치는 한·중 관계 파국 지름길,” 『시사저널』 통권 1375호(시사저널서, 2016.03.01), pp. 20-21; 고영대, “중국 겨냥한 미국의 사드 한국 배치, 미·중 간 전략안정 흔들기: 논단과 현장,” 『창작과 비평』 제43권 3호(창작과비평사, 2015), pp. 554-565.

51) 김태우, “북핵 위협과 사드(THAAD) 논쟁,” 『북한』 제520호(북한연구소, 2015), pp. 53-61; 김희상, “중국 압박 끌러가는 건 국가적 자살행위: 사드의 군사정치학,” 『신동아』 제59권 3호(동아일보사, 2016.03), pp. 132-141.

52) 『중앙일보』, 2016년 2월 15일, p. A2.

ing)’를 통하여 양국 합참의장이 정기적으로 군사상황을 협의하고 있다. 무엇보다 28,500명의 주한미군(육군 19,200명, 공군 8,800명, 해군 250명, 해병대 250명)이 주둔하여 유사시 미군 증원을 위한 인계철선(trip wire)으로 기능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북한이 도발하거나 도발의 징후가 보일 때마다 전략 폭격기, 잠수함, 항공모함 등을 출동시키곤 한다.

현재 상황에서 한국에게 가장 절실한 미국의 안보지원은 북한의 핵무기 공격에 대한 확장억제의 적용, 즉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대규모 핵 보복으로 철저히 응징하겠다는 약속과 그 이행이다.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확장억제가 핵 억제 및 방어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미 양국군은 2013년부터 ‘맞춤형 억제전략(tailored deterrence strategy)’을 완성하여 북한 핵무기의 위협단계, 사용임박단계, 사용단계로 나뉘서 취해야 할 조치들을 개발해왔고, 최근에는 탐지(Detect)·교란(Disrupt)·파괴(Destroy)·방어(Defend)라는 ‘4D’ 개념으로 응징보복과 방어를 위한 대응계획을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⁵³⁾

미군이 사드를 배치하려는 의도도 동맹공약의 이행과 관련이 깊다. 사드를 배치하여 주한미군의 생존성을 강화해야 미군이 안정된 상태에서 핵전쟁의 억제와 방어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드의 방어 범위가 넓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도 혜택을 입게 된다. 한반도는 좁아서 1~2개 포대만 배치하면 남한 전체에 대하여 상층방어가 가능해진다.⁵⁴⁾ 미국은 현재 5대 포대의 사드를 보유하고 있고 2개 대대를 추가로 구매해둔 상태라서,⁵⁵⁾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 금방 수송기로 한반도에 추가 포대를 배치할 수도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사드 배치는 한국에게 환영받을 일이지 의혹에 휩싸일 사안이 아니다. 따라서 사드 배치에 대한 한국의 주저는 미국보다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중요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드를 둘러싼 한국

53) 『조선일보』, 2014년 4월 27일, p. A1.

54) Michael Elleman and Michael J. Zagurek, Jr., “THAAD: What It Can and Can’t Do,” 38th North (March 10, 2016), p. 4, <http://38north.org/wp-content/uploads/2016/03/THAAD-031016-Michael-Elleman-and-Michael-Zagurek.pdf> (검색일: 2016년 4월 7일).

55) U.S. Missile Defense Agency Homepage, <http://www.mda.mil/system/thaad.html> (검색일: 2016년 4월 16일).

내의 논란이 가열되었던 2015년 7월경 미국의 워싱턴 정가에서 한국의 외교정책이 ‘친중(親中) 비미(非美)’라는 말이 떠돌았던 것이다.⁵⁶⁾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이전을 미국이 거부한 것도 한국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라는 한국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⁵⁷⁾ 오바마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하였을 때 남중국해 문제에 대하여 한국이 분명한 입장을 취해줄 것을 요청한 적도 있다.⁵⁸⁾ 사드 논란이 ‘한국의 미중관계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어버린 측면이 크다.⁵⁹⁾

한국이 사드 배치에 관한 협의를 개시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미국의 의구심은 다소 약화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협의에 소극적이거나 중국의 입장을 지나치게 고려할 경우 미국은 한국의 자율성 양보 정도에 회의론을 갖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동맹공약의 이행 정도는 약화될 것이다.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Donald Trump)는 한국이 방위비 분담을 늘리지 않을 경우 주한 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다고 하고, 북한과 한국, 혹은 일본이 전쟁을 하더라도 그것은 한국과 일본의 일이라면서 고립주의적인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적도 있다.⁶⁰⁾

2. 중국의 입장

한국에서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체결한 후 한반도 평화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경향이 증대되었다. 2008년 8월 25일 이 관계에 합의한 후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경제·문화 교류 중심의 양국관계를 정치·안보 분야로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⁶¹⁾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2014년 발간한 『국가안보전략』에서도 “북핵과 통일 문제 등 한반도

56) 『동아일보』, 2015년 7월 21일 p. A34.

57) 『중앙일보』, 2015년 10월 17일, p. 4.

58) 『연합뉴스』, 2015년 10월 20일.

59) Mark E. Manyin et al., “U.S.-South Korea Relation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R41481 (Washington, D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5), p. 14.

60) 『중앙일보』, 2016년 4월 4일, p. 8.

61) 『조선일보』, 2008년 8월 26일, p. A1.

의 핵심 사안에 대한 전략적 소통과 협력 강화”를 중국에 관한 목표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⁶²⁾

그러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에 대한 중국의 인식은 한국의 그것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중국 내부에서 이 관계의 의미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의가 존재할 수도 있지만 이를 공식적으로 공개한 적이 없고, 1993년 브라질과 동반자관계를 시작한 후 2014년 6월 현재 미국, 소련, 한국을 포함한 47개국 및 3개 국제기구와 동반자관계를 체결해두고 있듯이⁶³⁾ 한국과의 관계가 특별한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한국과 중국이 동반자관계를 체결한 이후인 2010년에 북한의 어뢰정이 한국의 군함인 천안함을 폭침시켰지만, 중국의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어떤 행동에도 반대하고 규탄한다”라는 원론만 되풀이하였고,⁶⁴⁾ 유엔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논의할 때도 거부권을 무기로 방해하여 결국 결의안이 아닌 ‘의장성명(Presidential Statement)’에 그치도록 하였다.

또한 몇 달 후 북한의 포병이 한국의 영토인 연평도를 대낮에 포격했음에도 중국은 문제의 원인이 분쟁지역 내에서 한국이 실행한 군사훈련이었다고 하면서 중국은 중립의 입장이며 분쟁의 무력해결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이었다.⁶⁵⁾ “연평도 사건으로 인해 한국과 중국 사이에 인식의 차이(perception gap)와 기대의 차이(expectation gap)가 구조화되었다”고 평가되기도 하지만,⁶⁶⁾ 원래부터 중국에게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는 큰 의미를 갖는 관계가 아니었다고 보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다.

대신에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체결 이후 한국에 대한 중국의 간섭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것은 사드 배치에서 전형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62) 국가안보실, 『희망의 새시대 국가안보전략』(서울: 청와대 국가안보실, 2014), p. 87.

63) Feng Zhongping and Huang Jing, “China’s Strategic Partnership Diplomacy: Engaging with a Changing World,” *European Strategic Partnership Observatory Working Paper 8* (June 2014), pp. 18-19, http://fride.org/descarga/WP8_China_strategic_partnership_diplomacy.pdf (검색일: 2015년 8월 16일).

64) 『조선일보』, 2010년 5월 31일, p. A1.

65) 정재호,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외교: 2012년, 1992년 그리고 1972년으로의 회고와 평가,” 『중국근현대사연구』 제56집 (한국중국근현대사학회, 2012), p. 35.

66) 이회옥, “중국과 동아시아: 연평도 포격사건을 보는 중국의 눈,” 『동아시아 브리프』, Vol. 6, No. 1 (동아시아연구원, 2011), p. 49.

사드가 방어용 무기이고, 이를 배치하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방어하기 위함이 명백함에도 중국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한국에게 미국의 사드 배치를 허용하지 말 것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7월 시진핑이 방한하여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드 배치를 허용하지 말도록 요구한 이래로 중국 관리들이 방한할 때 유사한 압력이 지속되었고, 최근에는 중국의 언론까지 공공연하게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어떻게 해서 중국의 안보가 위협받는지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하지도 않은 채 압박만 계속하고 있다. 2015년 3월 방한한 러셀(Daniel R. Russel)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아직 배치되지 않고 여전히 이론적인 문제인 안보 시스템에 대해 3국이 강하게 목소리를 내는 게 의아하다”라고 언급하였듯이,⁶⁷⁾ 대부분이 의아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중국이 사드 배치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이를 문제 삼아서 한미 동맹의 균열을 의도하거나⁶⁸⁾ 한국이 한미동맹에서 행사할 수 있는 자율성 정도를 시험해본다는 추측이 제기되는 것이다.⁶⁹⁾ 즉 “경제적으로 자국에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한국이 안보적 측면에서 자국의 영향권에 어느 정도 편입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이라는⁷⁰⁾ 추정이다. 그렇다면 동맹만큼은 아니더라도 중국 역시 동반자관계를 제공하는 대가로 한국의 자율성 양보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번 사드 배치 문제에서 중국이 ‘자율성-안보 교환’의 시각에서 보기 때문에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67) 『조선일보』, 2015년 3월 19일, p. A5.

68) 우정엽 (2015).

69) 서정경, “시진핑 주석의 방한으로 본 한중관계의 현주소,” 『중국학연구』 제70집 (중국학연구회, 2014), p. 265.

70) 이기완, “사드와 AIIIB를 둘러싼 미중관계와 한국,” 『국제정치연구』 제18집 1호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15), p. 337.

3. 한국의 입장

미국의 확장억제가 없을 경우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에게 미국의 안보지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실시한 후에 박근혜 정부는 전시 작전통제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 Authority) 환수를 ‘사실상 무기연기’시켰고,⁷¹⁾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실시한 후에는 오바마 대통령과 가장 먼저 전화로 상의하였다. ‘맞춤형 억제전략’이나 ‘4D전략’에서 나타나듯이 한국은 미국과 연합으로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미국의 핵전력이 기여하는 부분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한국이 미국과 동맹을 맺은 이유가 미국을 최대한 활용하여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한국은 당연히 미군의 사드 배치 요구를 수용해야 하고, 자율성을 양보함으로써 미국의 안보지원을 확실하게 만들고자 노력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사드 배치에 관하여 분명한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것은 중국의 입장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은 있으나 현재 북한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는 중국이고, 중국과 적대적이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얻는 것이 적지 않으며, 북한의 비핵화나 통일에 있어서 중국의 지원은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기 때문이다. 동등한 내용이나 정도는 아니지만, 결국 한국은 미국과 중국 양국으로부터 가능한 안보지원을 받아내고자 하는데, 양국이 요구하는 자율성 양보의 내용이 상반되어서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그래서 한국은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을 의식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이다.⁷²⁾

71) 『조선일보』, 2014년 10월 24일, p. A1.

72) 구본학 (2015), p. 152.

4. 분석 결과

미국의 경우 다수의 국가들과 오랫동안 동맹관계를 지속해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의무는 물론이고 자신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동맹의 ‘위계적 관리 구조’에 비하여 ‘무정부 상태적 관리구조’라고 평가될 정도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맹관계는 다소 느슨한 점이 있어서⁷³⁾ 미국은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한국에게 ‘자율성 양보’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사드를 둘러싼 논란이 한국에서 한창이던 2015년 4월 국무장관을 비롯한 다수의 미국 관리들이 한국을 방문하였지만, 사드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 사드에 관한 협의의 진전 정도에 대하여 양국의 발언이 다를 경우 미국이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한국이 자율성 양보를 다소 꺼린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동맹공약 이행 의지가 당장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미국의 퓨연구소(Pew Research Center)에서 2016년 5월 5일 발표한 바에 의하면 미국인의 57%가 대외 문제에 대한 미국의 불개입을 요구하고 있고⁷⁴⁾ 그와 같은 주장을 하는 트럼프가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정되었듯이, 한국이 현재와 같은 애매한 태도를 계속할 경우 예상치 못한 극단적인 조치가 나올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

중국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비동맹정책을 지속해왔고, 동맹과 같은 국제관계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에 따른 의무와 권리에 밝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한국에게 동반자관계를 허용한 것 자체가 중국이 한국에게 큰 혜택을 베푸는 것이고, 따라서 한국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중국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라는 근본 원인을 제거해주겠다고 약속하거나 설득력 있는 반대의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한국 정부에게 일방적인 압력만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73) 전재성, “동맹이론과 한국의 동맹정책,” 『국방연구』 제47권 2호(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4), pp. 77-78.

74) Pew Research Center, “Public Uncertain, Divided Over America’s Place in the World” (May 5, 2015), <http://www.people-press.org/2016/05/05/public-uncertain-divided-over-americas-place-in-the-world/> (검색일: 2016년 5월 7일).

중국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란을 통하여 한국이 미국과 중국 중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를 시험하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이다.

사드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어려워하는 상황이지만, 동맹과 동반자관계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할 경우 선택의 방향은 자명해진다. 한국이 자율성을 양보하여 사드 배치를 허용할 경우 미국은 동맹관계에 의하여 충분한 안보지원을 제공할 것이 확실하지만, 한국이 사드 배치를 허용하지 않더라도 중국이 한국을 위하여 제공해줄 것으로 약속하고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 2010년의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를 통하여 동반자관계가 통상적 국가관계와 크게 다르지 않음이 입증되기도 했다. 북한의 비핵화나 통일에 대하여 중국이 중요한 국가임은 분명하지만, 한국이 요청한다고 지원해 준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에서 보면 한미동맹과 동등하게 취급할 수 없는 것이다.

한국이 미군의 사드 배치를 허용하더라도 중국이 한중관계를 극단적으로 훼손할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도 냉정한 분석이 필요하다. 사드가 배치되고 나면 그 성능과 특성이 정확하게 알려지면서 오해가 해소될 수 있고, 이미 배치한 후에는 중국이 더 이상 시비로 삼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사드 배치에 대하여 중국이 일시적으로 반발하더라도 “한국을 적대시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⁷⁵⁾라고 추정되는 이유이다. 또한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한국이 중국에게 보여준 배려만으로도 중국과의 동반자관계에 대한 한국의 의무는 충분히 수행했다고 봐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반발한다면 중국에 대한 기대를 확실히 청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와 관하여 한국과 미국이 아직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데는 “사드 논란이 대북 제재를 담은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이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측면도 있다.⁷⁶⁾ 2016년 3월 2일 채택된 이 경제제재안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국이 협조해야 하는데, 사드를 배치할 경우 중국이 제재안을 소극적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의 제재안 이행상태를 보면서 사드 배치의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상당한 일리가 있는 조치일 수 있다. 실제로 2016년 6월 6~7일 베이징에서

75) 이기완 (2015), p. 340.

76) 『중앙일보』, 2016년 6월 6일, p. 4.

열린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경제대화’에서 중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안의 이행 정도 점검에 합의하는 등⁷⁷⁾ 아직까지 유엔의 제재안을 이행해 나가고 있다. 다만, 중국의 제재안 이행이 미흡하거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계속하여 높아지는 경우 사드는 배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V. 결론: 한국 안보에 관한 합의

일반적으로 하나의 방어용 무기체계를 둘러싼 논란이 국제관계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지만,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는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으로 격상되고 말았다. 사드 배치를 요구하는 미국과 이것을 반대하는 중국의 입장이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고, 그 사이에서 한국이 선택을 주저하는 상황이 오래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은 미국의 사드 배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중국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어서 협의의 속도가 빠르지 않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하여 한국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는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이다. 한국에서는 이것이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 안보분야의 협력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실체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50개 정도의 국가와 이 관계를 맺고 있고, 이 관계의 의미에 대하여 정확한 정의를 공개하고 있지도 않다. 2008년 한국과 중국이 이 관계를 체결하였지만, 2010년에 발생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서 중국은 이전과 다른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번 사드 배치에서도 동일한 형태가 반복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한국이 중국에 대하여 가져온 기대는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의 성격이 크다고 봐야 한다.

이번의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이 초기부터 단호하게 사드 배치를 허용하고, 중국의 요구를 일축했다라면 현재처럼 사안이 복잡해지지 않았을 수

77) 『연합뉴스』, 2016년 6월 7일.

도 있다. 한국이 취한 ‘3 No’와 같은 소극적 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한미일 3국 간의 안보적 불신을 조장하고자 중국이 이와 같이 반대했다는 분석도 존재한다.⁷⁸⁾ 일본이 미국의 X-밴드 레이더를 수용하였을 때 중국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안 된다”며 반대하였지만⁷⁹⁾ 일본은 이를 전혀 개의치 않은 채 단호하게 추진하였고, 그 결과 이 사안이 쟁점으로 부각되지 않았으며, 그 이후 일본의 BMD 추진에 중국은 별다른 반대를 제기하지 않았다. 미국과의 동맹과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동시에 강화해 나간다는 한국의 의도가 잘못된 것은 아닐 지라도 지나치게 좌고우면(左顧右盼)함으로써 문제를 키운 측면이 없지 않다. 이러한 태도가 지속될 경우 결국은 어느 쪽으로부터도 확실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생존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확장억제와 추가적인 지원이 필수적이고, 북한의 핵위협이 점점 강화됨에 따라 이제 한국은 한미동맹에 더욱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자율성-안보 교환 모델’에서 제시하는 것과 같이 미국이 요구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줘야 한다. 그동안의 국력신장으로 과거에 비해서 동맹의 비대칭성이 약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한미동맹은 비대칭 동맹이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에서 한국이 지나치게 많은 자율성을 양보할 경우 방기(放棄, abandonment) 위험성이 높아 지거나 주변국 관계를 손상시킬 위험도 있지만, 북한의 핵위협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이러한 위험을 크게 고려할 수는 없고, 이러한 위험의 해결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남북대화를 통하여 북한의 위협을 줄이고자 노력하거나, 지역안보협력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양자동맹의 위험을 극복하는 등의 방안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 사항은 사드 배치에 관한 중국의 반대가 한국 내에서 벌어진 사드 논란에 영향을 받아서 촉발 또는 강화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이다. 2014년 6월 스캐퍼로티 사령관이 본국이 사드 배치를 건의하였다는 사실을 공개한 이후 한국에서는 사드가 중국의 ICBM을 요격할 수 있고, 그 레이더가 중국의 군사 활동을 모두 탐지할 수 있으며, 따라서 사드를

78) 이기완 (2015), p. 337.

79) 『연합뉴스』, 2014년 10월 23일.

배치하면 중국과 미국 간의 전략적 경쟁에서 한국의 입장이 곤란해질 것이라는 주장이 만연하였고, 이것이 중국으로 전달된 측면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중국의 압력과 간섭을 촉발한 것이 우리 내부의 정제되지 못한 논란일 수 있다. 안보 관련 사안은 국내에 머물지 않고 국제적인 파급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지식인들과 언론은 정확한 내용을 근거로 실질적인 논쟁을 전개할 필요가 있고, 국민들도 부정확한 루머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은 신뢰할 만한 억제 및 방어체제를 갖추지 못한 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이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와 군대가 존재하는 본연의 임무이다. 자체적인 힘으로 가능하면 최선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동맹국의 힘을 빌려서라도 이 본연의 임무를 철저하게 수행해야 한다. 자율성을 다소 양보하더라도 미국의 안보지원을 확실하게 보장받아서 국가와 국민들을 보호해야 한다. 이번에 제기된 사드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기될 방위비 분담, 남사군도 문제 등의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도 한국은 항상 ‘자율성-안보 교환’의 동맹이론을 유념하면서 논의 및 결정해야 하는 이유이다.

【참고문헌】

- 고영대. “중국 거대한 미국의 사드 한국 배치. 미·중 간 전략안정 흔들기: 논란과 현장.” 『창작과 비평』 제43권 3호 (창작과 비평사, 2015).
- 구본학. “한미동맹과 한중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조화.” 『신아세아』 제22권 4호 (신아시아 연구소, 2015).
- 국가안보실. 『희망의 새시대 국가안보전략』 (서울: 청와대 국가안보실, 2014).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미군사관계사 1871-2002』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3).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미동맹 60년사』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3).
- 국방부. “THAAD 관련 참고자료.” 비공개자료 (국방부, 2016.02).
- 김진명. 『싸드(THAAD)』 (서울: 새움, 2014).
- 김태우. “북핵 위협과 사드(THAAD) 논쟁.” 『북한』 제520호 (북한연구소, 2015).
- 김희상. “중국 압박 끌려가는 건 국가적 자살행위: 사드의 군사정치학.” 『신동아』 제59권 3호 (동아일보사, 2016.03).
- 박근재. “사드(THAAD)의 한국 배치를 둘러싼 논란과 정책적 함의.” 『전략연구』 통권 제68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6).
- 박휘락. “방위비분담 현황과 과제 분석: 이론과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국방정책연구』 제30권 제1호 (한국국방연구원, 2014).
- _____. “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싼 논란에서의 루머와 확증편향.” 『전략연구』 제23집 1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6).
- 서정경. “시진핑 주석의 방한으로 본 한중관계의 현주소.” 『중국학연구』 제70집 (중국학 연구회, 2014).
- 신영순. “THAAD 논쟁에 얽힌 허와 실.” 『국가안보전략』 통권 30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4.12).
- 우정엽. “사드(THAAD)가 중국에게 위협이 되는가?” *JPI PeaceNet*, No. 2015-05 (제주평화연구원, 2015). http://jpi.or.kr/kor/regular/policy_view.sky?id=5377&code=papermorgue&scode=&ref=5377 (검색일: 2016년 1월 20일).
- 유동원. “중러 전략동반자관계와 경제협력.” 『국제정치연구』 제9집 2호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06).
- 이기완. “사드와 AIIB를 둘러싼 미중관계와 한국.” 『국제정치연구』 제18집 1호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15).
- 이수형.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지구적 동반자관계: 유럽 역내의 관련 국가들의 입장과 한미동맹에 대한 함의.” 『국방연구』 제53권 1호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0).

- 이지용. “사드(THAAD) 배치 논쟁과 한·중 관계.” IFANS FOCUS, 2016-03K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6.02.29).
- 이희옥. “중국과 동아시아: 연평도 포격사건을 보는 중국의 눈.” 『동아시아 브리프』, Vol. 6, No. 1 (동아시아연구원, 2011).
- 전재성. “동맹이론과 한국의 동맹정책.” 『국방연구』 제47권 2호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4).
- 정옥식. 『미사일 방어체제(MD)』 (서울: 살림, 2003).
- 정재호.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외교: 2012년, 1992년 그리고 1972년으로의 회고와 평가.” 『중국근현대사연구』 제56집 (한국중국근현대사학회, 2012).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미국 MD에 참여 규탄 기자회견문』 (2008.03.20).
- 현대경제연구원. “한중 경제 관계의 중요성과 나아가야 할 방향.” 『현안과 과제』 제16-8호 (현대경제연구원, 2016.03.09).
- 홍규덕. “사드(THAAD) 배치에 관한 주요 쟁점과 미사일방어(MD) 전략.” 『신아세아』 제22권 4호 (신아시아연구소, 2015).
- 홍순도. “사드 배치는 한·중 관계 파국 지름길.” 『시사저널』 통권 1375호 (시사저널사, 2016.03.01).

- Altfield, Michael F. “The Decision to Ally: A Theory and Test.” *The Western Political Quarterly*, Vol. 37, No. 4 (December 1984).
- Elleman, Michael, and Michael J. Zagurek, Jr. “THAAD: What It Can and Can’t Do.” 38th North (March 10, 2016). <http://38north.org/wp-content/uploads/2016/03/THAAD-031016-Michael-Elleman-and-Michael-Zagurek.pdf> (검색일: 2016년 4월 7일).
- Klingner, Bruce. “South Korea Needs THAAD Missile Defense.” *Backgrounder*, No. 3024 (Heritage Foundation, June 12, 2015).
- Manyin, Mark E. et al. “U.S.-South Korea Relation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R41481 (Washington, D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5).
- Morrow, James D. “An Alternative to the Capabilities Aggregation Model of Allianc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5, No. 4 (Nov. 1991).
- Zhongping, Feng, and Huang Jing. “China’s Strategic Partnership Diplomacy: Engaging with a Changing World.” *European Strategic Partnership Observatory Working Paper*, No. 8 (June 2014). http://fride.org/descarga/WP8_Chinastrategic_partnership_diplomacy.pdf (검색일: 2015년 8월 16일).

〈인터넷 자료〉

- 리얼미터. “美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찬성 42.1% vs 반대 27.2%.” <http://www.>

realmeter.net/2015/03/%eb%af%b8%ea%b5%ad-%eb%af%b8%ec%82%ac%ec%9d%bc-%eb%b0%a9%ec%96%b4%ec%b2%b4%ea%b3%84-%ec%82%ac%eb%93%9c-%eb%b0%b0%ec%b9%98-%ec%b0%ac%ec%84%b1-42-1-vs-%eb%b0%98%eb%8c%80-27-2/ (검색일: 2016년 6월 9일).

Central Intelligence Agency. “The World Fact Book.”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 (검색일: 2016년 4월 1일).

Pew Research Center. “Public Uncertain, Divided Over America’s Place in the World” (May 05, 2015). <http://www.people-press.org/2016/05/05/public-uncertain-divided-over-americas-place-in-the-world/> (검색일: 2016년 5월 7일).

U.S. Missile Defense Agency Homepage. <http://www.mda.mil/system/thaad.html> (검색일: 2016년 4월 16).

〈신문 자료〉

『뉴시스』.

『동아일보』.

『연합뉴스』.

『조선일보』.

『중앙일보』.

『프레시안』.

[ABSTRACT]

An Impact of the Controversies over the THAAD to the South Korea-U.S. Alliance and the South Korea-China Relation

Application of “Autonomy-Security Trade Model”

Hwee-Rhak Park | Koomin University

This paper is written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controversies over the deployment of 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o the South Korea-U.S. alliance and the South Korea-China relation by applying the “Autonomy-Security Trade Model,” which is a prominent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For this purpose, it uses the concept of trade-off between giving up of autonomy by the weak country and the provision of the security by the strong country in the theory. It analyzes the positions of the U.S. and China and finds a few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based on the theory.

As a result, this paper evaluated the controversies over the THAAD, a military equipment, happened to become a serious international issue due to China’s strong opposition and South Korea’s hesitation regarding its deployment. South Korea postponed the decision for the deployment, while expecting some reciprocal favors by China based on its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relation’ with China. If South Korea had decided to accept the deployment of THAAD from the beginning, it would not have been in a difficult situation, as it faces now.

Since South Korea has to protect its people from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it desperately needs. extended deterrence and additional

assistance by the U.S. As clearly demonstrated by uncooperative actions by China regarding the international sanctions on North Korea after the sinking of South Korean warship Cheon-an and bombardment on the Yeonpyeong island in 2010, the partnership with China is not trustworthy. Therefore, South Korea should be loyal to its alliance with the U.S by giving up its autonomy in a more active manner. At the same time, South Korean intellectuals and media should not spread wrong information regarding the THAAD and other security issues in order to prevent this kind of undesirable controversy.

Keyword: THAAD, South Korea-US Alliance, South Korea-China Relations, North Korean Nuclear Threat, Autonomy-Security Trade-off, Partnership Relation

투고일: 2016년 4월 11일, 심사일: 2016년 5월 15일, 게재확정일: 2016년 6월 14일
